

특검이나, 특감이나... 여야, 오늘 '창-방패' 대결

민주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서 처리...국힘 이탈표 최대 관심 국힘, 특별감찰관 추천 의총...김여사 해법 카드로 특검법 거부 명분

여야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특별감찰관 추천을 두고 극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14일 본회의에 수정된 김 여사 특검법을 올려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수정안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 두 갈래로 압축하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오는 28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재표결에서 최대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만약 재의투표 날까지 명 씨 관련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여론 지형이 기운다면 특검 수용으로 선회하는 여당 의원들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회의 이탈표는 지난 2월 첫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소 1표, 지난달 4일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4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8표 이상 이탈하면 특검법은 재표결을 통과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회의가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뺐더니 '악법'이라고 우긴다"며 "국민회의 의원들은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 공천은 김 여사가 줬을지 몰라도 당선은 국민이 시켜주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특별감찰관도 김 여사 특검법을 대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의 활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 이미 의혹이 불거져 있는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다는 거제다.

국민회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장 추천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 등 독소 조항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 온 친한(한동훈)계도 특별감찰관 추진 카드를 내세워 특검법 수정안에 선을 그으면서 사실상 단일대오가 형성됐다.

이에 대해 친윤(친윤석열)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의 수정안과 관련해 "결국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이반책"이라며 "한 대표 측에서는 그 사실을 비교적 잘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회의는 14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진 여부를 결론 낸다.

표결 없이 의원들의 합의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원내 지도부가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하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선언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특검을 도입하기 이전에 대통령 가족의 비위행위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자고 야당에 압박함으로써 특검 공세를 방어하겠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친윤계 중진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당론으로 할 필요 없이 원내지도부가 특별감찰관을 추진한다는 정도로 정리하면 적당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한계 인사는 "우리가 특별감찰관을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민주당에 반격 명분을 가질 수 있다. 자칫하면 특검 표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회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일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민생법안과 관련해 협상을 마친 뒤 돌아서는 순간까지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1억원' 상향 합의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등 6개 법안 정기국회서 처리키로

여야는 13일 이만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정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지적이 일었고 여야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는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위기 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등의 처리에도 합의했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 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에도 이견이 없었다.

여야는 이외에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 인구전략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인공지능(AI) 산업 진흥을 위한 인공지능산업육성법 등에 대해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아이돌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신용회복 채무조정 대상에 비(非)금융채무를 포함하는 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농업재해 관련 보상 범위를 조정하는 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에도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렇게 여야가 합의하거나 일부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는 법안은 총 70여개에 달한다.

국민회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양당 정책위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더 늘릴 수 있을지 상의하고 상임위에서 이런 법안들을 우선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성준 정책위의장은 "수용이 가능한 법안이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 동의안 상정

외통위, 전년비 8.3%↑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발효 방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SMA 비준 동의안은 법안소위 심사를 마치면 외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미는 지난달 제12차 SMA를 타결해 2026~2030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했다. 협정에 따르면 2026년도 분담금은 1조5192억원으로, 전년도 1조4028억원 대비 8.3% 늘었다.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겠다는 입장을 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서둘러 국회 비준을 거쳐 SMA

를 발효한다는 방침이다.

외통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국군부대의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과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을 각각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두 동의안은 모두 올해 말 종료되는 우리 군의 파병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내년 하반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일 지정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했다.

/연합뉴스

5개 야당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출범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 소속 의원 41명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가 공식 출범했다.

탄핵연대에는 민주당 27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각 1명이 개인 자격으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박수현·혁신

당 황용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탄핵연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명태균 게이트"로 드러난 선거 공천 개입과 산업단지 지정 의혹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국정 난단은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는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탄핵연대를 계속 확대하고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의 의원을 반드시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연대와 관련해 "개별 의원이 자발적으로 탄핵연대에 참여하는 걸로 안다. 방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원룸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